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이 글은 뉴스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면서 무리하게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실현하려 애쓸 필요가 없으며, 그보다는 ‘언론의 진술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실천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 주장은 한국 언론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도출된다. 첫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향성 문제가 심각하며, 둘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객관주의적 언론 규범의 성립 배경과 ‘사실과 가치의 분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검토한 후, 결국 문제는 언론인들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뉴스의 참과 옳음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해 타당하고도 적절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key words: 한국 언론의 경향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과 가치의 분리, 언론의 객관성,

신문윤리위원회, 하버마스, 보편적 화용론

* 이 글의 초고는 2009년 5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정 토론해 주신 성병욱, 김재욱, 김경호, 김경호 님 그리고 발표문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세미나 참석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정된 원고는 2009년 6월 5일 한국언론학회 50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의 저널리즘 분과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최이숙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 jwrhee@snu.ac.kr

1. 문제 제기: 한국 언론의 경향성

나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향성(tendentiousness)'이라고 본다. 경향성이란 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칭한다. 그것은 개별 기사의 논조, 편집국의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언론사의 전반적인 편집 방향 등에서 나타난다. 경향적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선별적으로 강조하거나 윤색한다. 경향적 기사의 내용은 틀 지워져(framed) 있으며, 정보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드러낸다. 경향적 기사의 논조는 사안의 의미, 중요성, 관련성 등과 관련해서 편향을 드러낸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은 사실, 논설, 의견기사, 탐사기사, 피쳐 등은 물론 일반 사실 기사, 심지어 스트레이트 단신에서도 발견된다.¹⁾

경향성에 대처하기 위한 한 방법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 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명제와 의견 명제의 구분'이라는 고전적 언론규범을 준수하는 일이다. 경향성이란 결국 사실 기사에 가치, 이념, 주장, 판단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므로 사실 기사는 사실만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이 개입된 기사는 그것이 의견 기사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독자가 경향적으로 유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의견과 사실의 분리'에 대한 보도 준칙을 담고 있다. 제3조 1항은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현실을 보면, 사실과 의견의 분리 준칙은 너무나 참담하게 위반되고 쉽게 무시된다. 일부 언론인은 심지어 이 준칙을 정당한 윤리 규정이나 규범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 언론인들 중에는 물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기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기자들이 상당수이며, 심지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²⁾ 언론의 경향성이 새로운 규범이 되어서인

1) 시민들은 우리 언론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2008년 5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경향성과 연관된 문제인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 이념적 편향성, 자사 이기주의 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69%가 신문기사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신문이 '국민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데 68%, '부유층과 권력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데 66%동의했다. 방송뉴스에 대한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데 63%, '선정적이고 흥미위주로 편집한다'에 61%, 그리고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에 61%가 동의했다.

2) 2009년 6월 언론인 전문 세미나에 참석한 34명의 부국장급 이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던 언론인은 8명,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던 언론인은 6명,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지지한 언론인이 5명 이었다. 나머지 언론인들은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 문제는 이렇듯 사실과 의견의 분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만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논의나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고전적 언론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나는 한국 언론의 경향성을 교정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언론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전통적 언론 규범을 수정하고 확장해서 ‘언론은 참과 옳음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구분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전통적 언론 규범은 다음 세 가지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언론 윤리에 핵심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의 이론적 기초인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함으로써 언론의 경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번째 전제는 의심스러우며, 두 번째 전제는 불가능하며, 세 번째 전제는 필연적이지 않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착을 범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다고 해서 언론의 경향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불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당착과 불필요함을 극복하고 일관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2. 경향적 기사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 언론의 경향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윤리위원회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기사를 검토해왔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논의해왔다.

1) 경향적 언론 보도의 유형과 특징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1항은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그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10건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하는 사례였는데, 이는 2008년 22건으로 증가했다. 주의 받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 2008년 4월 7일자 <너무나 이기적인 현대차노조/ 울산 3공장, 다른 물량 더 안 준다고 주말 특근 거부>라는 기사가 한 예이다. 기사의 도입은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사이에 차종 생산물량 배분에 불만을 품은 공장에서 특근을 거부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고 시작했다. 이 기사는 노조의 특근 거부와 노사협의 파기에 대한 책임 공방전을 소개하면서, 사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사를 몰아갔다. 특히 기사 제목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인”이라는 윤색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제목을 통해 경향성을 드러낸 경우다. 이 기사는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주의 결정을 받았다.

『한겨레』2008년 6월 13일자 <‘사의 표명’ 내각 성적표/ 김도연 교육과학부 학교자율화 등 ‘청와대 해바라기’ 무력하기만>이란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경향성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는 데 있다기보다, 그런 비판의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서 드러난다. 주요 장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비판적 평가를 내렸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사 내용 중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아니라 차라리 기업부라고 이름을 바꾸라’라는 비판을 받는다.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 민주노총은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노총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을 정도다”가 있다. 기사의 부정적 논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도대체 누가 기업부라고 이름을 바꾸라 했다는 것인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기사 내용에 전제된 가치가 있다. 즉 친기업적이면 사퇴촉구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공분’ 등과 같은 표현들도 경향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

『문화일보』2008년 6월 14일자 <정연주 사장, 2000억 승소 확실한 소송을 왜?>라는 기사도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기사이다. 이 기사는 KBS가 서울지방법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 승소해서 2000억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전했다. 기사 내용은 검찰의 수사 동기와 수사 방향을 소개하고, KBS 측의 해명을 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단계에서, 고발과 해명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의 도입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목에 “왜?”라는 의문사를 제기함으로써 의혹이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가 사실에 기초하기보다 예단을 갖고 접근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했다.

『조선일보』2009년 1월 9일자 <허무맹랑한 주장, 기득권층 비난한 글 많아>는 제목의 기사는 미네르바의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제시했다. 그런데 기사는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30대 무직에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력이 없었다. 부실한 기초에 기반 했기 때문에 그가 펼쳤던 논리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가 체포되기 전부터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는 등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환율에 대한 일부 예언이 적중한 것을 소개하면서, 익명의 민간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빌려 “미네르바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폄하하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의 입장이나 주장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은 없었다. 특히 이 기사는 미네르바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적중했을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경우이고, 반대로 빚나갔을 경우에는 근거 없이 예측해서 틀렸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경향성을 드러낸 경우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사안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향적 기사들의 특징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의 선택: 복잡한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즉 정확한 사실을 담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단지 부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실제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예컨대, 취재원과 인용문 등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중의 일부를 강조하는 수법 등이 사용된다. (2) 윤색적 표현: 특정한 관점에 근거해서 평가적 함축이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충격을 주고 있다’, ‘혼란을 유발한다’, ‘의혹이 일고 있다’ 등과 같이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대 된다’, ‘순항 중이다’, ‘전망 있다’ 등과 같이 긍정적 의미가 함축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3) 전제된 가치: 기사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당연한 전제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파업과 같이 논쟁적 사안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노동자 권리’를 전제하는지, 아니면 ‘평화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삼는지에 따라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경향적 기사는 이 때 어느 한 가지 가치만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사실 관계를 기술한다.

위에서 제시한 경향적 기사의 특징은 사실 주장을 담고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로 적용된다. 그런데 실은 의견 기사도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방식으로 경향적일 수 있다. 사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는 해설 기사나,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과 폭로를 담고 있는 탐사 기사, 그리고 주장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사실이나 논평 기사 등은 의견을 담고 있어서 경향적인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견해를 한 쪽으로 몰아가면서 경향적이 된다. 따라서 의견 기사의 경향성은 사실 기사의 그것과 구성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후자가 사실의 선택, 윤색, 가치 개입 등을 통해 나타난다면, 전자는 전제된 담론 규범의 위반을 통해 나타난다. 다시 말해, 특정 가치나 규범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견 기사가 사실성, 일관성, 공정성 등과 같은 보편 규범을 위반하면서 특정한 견해를 부당하게 강조할 때 경향적이 된다.³⁾ 구체적으로, (1) 근거 없는 의견: 사실적 근거 없이 평가, 판단, 의견의 결과만을 제공하는 것, (2) 비일관성: 동일한 사안을 상반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동원해서 편의에 따라 한 조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3) 불공정: 기사를 통해 비판 받거나 평가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기사 내용의 구성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2) 경향적 보도의 원인과 결과

우리 언론은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스스로의 경향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능해서 대처하지 못하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가? 첫째, 알지 못해서 경향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언론학자와 평가들이 한국 언론의 불공정성, 편파성, 의도성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시한 바 있으며(강명구, 2004; 남재일, 2008; 박재영, 2005; 윤영철, 2004; 이민웅 외, 2006; 이준웅, 김경모, 2008), 시민단체나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보도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보도에 대한 검토와 비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검토와 비판의

3) 이 글의 초고에서는 균형성과 다양성 등도 의견 기사의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지만, 논의와 고려 끝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철회한다. 개별 기사가 관련된 주장이나 근거들을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많은 입장을 두루 고려하면 좋겠지만, 모든 의견 기사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나는 균형이나 다양성은 개별적인 의견 기사의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전체적인 편집과 편성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사 생태계의 담론 지형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본다.

기준은 다름 아닌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언론윤리요강 등에 규정된 공정성, 사실성, 사실과 의견의 분리 등과 같은 조항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인들이 이런 비판을 정말로 모른 채, 경향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둘째, 경향적 보도를 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어떤 이유로 그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언론의 경향성이 역사적으로 계승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경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배양되어 전승되는 일종의 전통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언론의 '지사적 전통'이 경향적 보도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장지연, 신채호, 서재필 등의 최초의 언론인들은 계몽적 선각자였으며, 해방 후 언론인들은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을 자임했다. 유신시대의 동아·조선 투위를 겪은 언론인들과 80년대 이후의 언론민주화운동 시대의 언론인들은 모두 민주주의, 자유주의, 언론의 독립 등을 강력하게 주창했으며, 이른바 운동적 시각을 지녔다. 이렇듯 계몽적 선각자, 비판적 지식인, 가치의 주창자, 민주주의 수호자 등의 역할을 자임해 온 한국 언론인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열중한다. 이런 전통의 견지에서 보면, 경향성은 우리 언론의 핏줄에 내재한다.

경향성은 우리 언론의 지배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관행 중에 '야마'를 활용해서 사건을 지칭하고, 취재 지시를 하고, 정보원을 정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다(송용희, 2006). 신입기자는 '야마를 잡는' 방법을 교육 받으면서 숙련된 기자가 된다. '야마'란 취재 및 보도에 전제되는 기사의 요점 또는 주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지칭한다. 논의를 위해, 일단 이 글에서는 '야마'를 기자들이 공유하는 (가)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 (나) 기사의 틀(frame), (다) 논조 등의 결합된 일종의 '주제적 정향(thematic orientation)'이라고 규정하자. 취재와 기사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편집 데스크와 취재기자는 사건과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야마'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일단 '야마'를 잡으면 취재와 보도 방향은 거의 정해진 것이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언론사마다 전혀 다른 접근, 논조, 평가를 보이는 이유는 서로 다른 야마를 잡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야마'를 잡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사안에 대해 특정 방향으로 접근해서,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마'를 잡고 취재와 보도를 하는 관행 속에 경향성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인들은 논쟁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며,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알면서도' 경향성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동반하는 전통은 사안을 정의하고, 중요한 요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취재원과 인용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행인 '야마 잡기'에 의해 유지된다. 한국 언론인들은 이른바 '언론의 객관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언론의 객관주의가 실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 사실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형식적 객관성 추구가 공정성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남재일, 2008).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언론의 불공정성 또는 경향성은 계몽적 목적을 위해 주창적이며 참여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언론인이 '알면서도 법하는 일'이 된다. 아마도 우리 언론인들 중에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와 같은 언론 규범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신념을 실제 취재 및 보도 과정에 적용하지 않는 이

들이 많을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언론은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논조를 표방하는 언론사는 그런 편집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구독자를 유지하고, 광고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경향의 언론사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갈등적이고 분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잠재적 이용자들이 이념에 따라 좌우로 분열되어 분포한다면, 중도를 지향하고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편집을 하는 것은 잠재적 독자를 확보하는 상책이 아니라 당파적인 충성스런 독자를 저버리는 하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준웅, 2005).

경향적 보도는 독자에 대해서는 물론 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독자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면, 경향적인 뉴스를 접한 독자는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바에 따라 제한된 정보와 편향된 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경향적이며 정파적 언론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체계적으로 제한된 정보와 해석만 접하게 된다. 혹자는 경향적 언론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편집 방침과 논조를 갖는 두 개 이상의 언론을 보는 시민들은 결국 대립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로 편집 방향과 논조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언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접근가능하며, 시민들이 두 개 이상의 언론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타당하다. 이는 불가능한 전제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향적 보도는 결국 언론사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론의 경향성은 언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언론은 결국 신뢰를 잃어 독자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준웅과 최영재(2005)는 한국 신문의 구독률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공정성 위기에 있다고 보았다. 전국의 1200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근거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정치적 이념이 극단적인 시민들이 신문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신문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는 독자들은 결국 신문을 덜 보게 된다고 한다. 결국 신문의 정파성이나 편집방침이 뚜렷할수록 안정적으로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고려에 따라 경향성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라고 평가되는 신문은 점차로 독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사실과 의견의 구분

언론이 경향적이 되면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소홀하다.⁴⁾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경향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찾겠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의도이다. 먼저 논의를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고전적 명제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1) 사실과 가치의 분리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흔히 ‘사실과 가치의 분리’와 연관되어 논의된다.⁵⁾ 흔히 언론인이 의견과 사실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연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분리를 ‘사실 표현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언론 윤리의 기초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에 대한 고전적 주장은 흄의 “당위(ought)를 존재(is)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존재에 대한 판단은 사실을 묘사하며, 이로부터 어떤 당위에 대한 판단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란 언제나 현상에 대한 그림과 같은 의미(pictorial semantics)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닮은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utnam, 2002, 15). 그런데 그림과 같은 속성을 갖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다. 감정이나 정서 등과 연관된 가치나 덕성 등은 그림 같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을 묘사하지 못한다. 흄은 사실과 가치의 표상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가치와 관련된 판단은 ‘명령(imperative)’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거짓말은 나쁘다’는 판단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명령인데, 이는 사실에 대한 묘사나 기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은 인간의 욕구나 감정 등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임을 주장했다. 현대 실증주의자는 흔히 이런 칸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은 가치를 전제하는 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 실증주의자들의 논의는 윤리학의 비인지주의(non-cognitivism) 또는 정의주의(emotivism)로 이어진다.

실증주의자 또는 비인지주의자에게 있어서, 모든 의미있는 명제는 ‘사실적’이거나 아니면

-
- 4) 그러나 역은 참이 아닐 수 있다. 즉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결론이 제시하듯이, 실제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도 경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5)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란 실은 문장 또는 명제에 제시된 사실에 대한 주장 또는 명제와 주관적 의견 명제의 구분이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실 명제와 의견 명제의 구분’이라고 쓰는 편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 된다. 사태의 객관적 존재를 지칭하는 사실과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표현인 의견은 당연히 구분된다. 흔히 말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란 이런 구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주장과 의견 표명이 구분 가능한지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언론학 교과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학 문헌은 편의상 이를 그냥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고 지칭한다. ‘사실 명제와 의견 명제의 구분’은 ‘사실과 가치의 분리’와도 다르다. 전자가 명제 또는 언술의 속성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문장이나 언술에 의해 지칭되는 바인 사물 및 그 구성의 본성에 대한 것이다.

‘분석적’이어야 한다. 이런 구분에 기초해 보면 도덕적 판단은 사실적이지 않다. 사실은 관찰에 의해서 확인되며,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도덕적 판단은 가치를 전제하며, 관찰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사실적 명제가 아닌 도덕적 판단이 참과 거짓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분석적(analytic) 명제’일 수밖에 없는데, 도덕적 판단은 분명 이것도 아니다. 도덕적 판단은 인지적 명제가 아니라 단지 화자의 행동 의지나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이다. 무엇이 옳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은 사실은 ‘그것 좋구나!’라고 감탄하거나 ‘그렇게 해라!’고 소리치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 비인지주의자는 사실을 객관화시키고, 가치를 탈합리화시킴으로써, 사실과 가치를 엄밀하게 분리한다.

그러나 이런 엄밀한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뜻밖에 ‘사실’ 쪽에서부터 무너진다. 사실을 주장하는 개별 문장이 결코 참 거짓으로 완전히 확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수학적 논증이나 논리적 동어반복과 요소의 ‘의미’ 연관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경우와, 사실적 문장과 같이 ‘관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참이 확인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는 분석적 명제, 후자는 종합적 명제라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실증주의자는 도덕적 판단을 관찰에 의해 확립되는 종합적 명제라 보지 않으므로, 그것은 분석적 명제이거나 아니면 참과 거짓과 관련 없는 문장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콰인(Quine, 1960)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그는 관찰을 통해 개별 문장의 참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장의 구성 요소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콰인이 제시한 ‘지시의 불가투시성(inscrutability of reference)’에 따르면 문장의 참 거짓은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개별적 종합적 명제, 즉 사실적 문장은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없다. 콰인에 따르면, 오직 모든 경험적 대상에 조용하는 이론 전체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석과 종합의 구분이라는 경험주의의 핵심 명제는 일종의 도그마임이 밝혀진다. 이렇듯 자명한 듯이 보였던 분석과 종합의 구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원초적인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일단 콰인에 의해서 ‘사실’을 확립하는 분석과 종합 명제의 구분이 무너지고 난 후, 사실과 가치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했던 이론들은 급격하게 입지가 불투명해진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장이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간주되었던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이제 철학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모든 사실은 실은 가치를 전제한다. 퍼트남(Putnam, 2002)은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사실을 검증하려는 판단이 ‘가치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을 선택하는 데, 반드시 가치가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선택하는 데, 당연히 가치가 개입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론을 확인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즉 검증 과정에도 가치들이 개입한다. 예를 들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수반되는 일련의 판단에 필수적인 일관성(coherence), 단순성(simplicity), 합리성(reasonableness), 자연성(naturalness) 등의 개념은 사실 일종의 가

치이다. 요컨대, 사실은 가치를 전제로 확립되며,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

둘째, 가치와 사실이 뒤엉킨 개념들이 있다. 머독(Murdoch, 1971)은 일찍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 가운데 어떤 것은 추상적이며, 다른 개념들 보다 풍부한 서술적 함의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어떤 도덕 개념은 단순히 표현적이거나 명령적인 요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풍부하게 기술하는 요소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두터운 개념들(thick concepts)’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들은 예를 들어 ‘잔인하다’, ‘정숙하다’, ‘버르장머리 없다’, ‘배려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런 두터운 개념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적용되는 사태에 대한 특징과 더불어 그런 특징이 갖는 도덕적 함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구를 ‘잔인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함축하는 과도한 괴롭힘과 그에 수반하는 비윤리성을 동시에 전제하고 또한 함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동시성이 이 두터운 개념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 속에는 사실과 가치가 서로 풀어 헤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다.

셋째, 가치 개념적 판단도 사실일 수 있다. 본드(Bond, 1996)는 가치를 함축하는 도덕적 판단도 사실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해소시킨다. 그는 먼저 무어(Moore, 1903)의 ‘자연주의 오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이 참이나 거짓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단순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검증에 근거한 경험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참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실개념을 확장시킨다. 도덕적 판단이 실천적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판단은 객관적으로 참이 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데, 바로 그 이유가 공동의 안녕이나 공동선과 같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유이거나 ‘약속 수행’, ‘공정함’, ‘자비로움’ 등과 같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안녕이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이유라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특정한 조건에서 가치에 대한 일련의 주장들도 합리적으로 정당화된 것이 되고, 결국 객관적으로 참이 된다.

결국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전제로 삼아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즉 사실 명제와 의견 명제의 구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언론 윤리로 확립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이론적 명제에서 연역된 것이 아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직접 관행, 이념, 가치의 일부로서 확립된 것이며, 특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정당화된다. 따라서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이론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해서 저절로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규범으로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의 문제점은 별도의 분석을 요구한다.

2) 언론규범으로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론의 객관성 이념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 언론의 객관성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이다. 섯슨(Schudson, 1978, 6)에 의하면, 언론인에게 있어서 “객관

성에 대한 신념이란 ‘사실’에 대한 신뢰, ‘가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신뢰, 불신, 그리고 의무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전략적으로 경영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언론 규범으로서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사실 중심적 담론’이 지배적인 영미 언론의 전통 속에서 19세기 초에 “발명”되었다고 한다(Chalaby, 1996; Mindich, 1998; Schiller, 1981; Schudson, 2001). 특히 183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대중지들은 이미 비당파성과 비판파성, 그리고 객관성 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정당이나 거대 상인에 예속된 당시의 정파적 언론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구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chudson, 1978). 문예적이며 비판적인 전통이 강한 유럽 대륙의 언론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정파성과 상업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이 주요한 관건이었던 영미 언론은 언론직을 전문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객관성’이란 가치를 일종의 직업적 이념으로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다(Schudson, 2001).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상업적인 성공을 노렸던 대중지(the penny press)들이 최초로 객관성 관련 규범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19세기 초 대중지가 표방했던 의견과 사실의 구분은 주로 정파적 입장이나 사회적 갈등으로부터의 ‘초연함(detachment)’을 의미하는 데, 이는 사실성의 강조, 역피라미드 형 글쓰기, 인터뷰 기법의 발전, 균형적인 글쓰기 등과 함께 언론의 객관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발전된다(Mindich, 1998).

미국 언론의 객관성 이념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Schudson, 1978). 당시 정부의 조직적인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상업적인 광고홍보의 영향력에 압박을 받았던 언론인들은 이미 언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관성이 불가피하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광란의 매카시즘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실은 ‘사실 보도’ 관행이 일조했다는 반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언론은 사실 보도와 해석 보도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전형화하고, 후자는 사소하게 취급했는데, 사실 보도를 한다면서 매카시 상원의원의 거짓과 참소를 비판 없이 받아쓰으로써 매카시즘으로 인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Schudson, 1978, 168).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불신과 언론인의 주관성으로 인한 타락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언론은 자신의 주관적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객관성을 일종의 직업적 규범으로 확립하고 강화했다. 또한 당대의 ‘과학자들의 방법론’이었던 경험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인 검증의 원칙, 주관성 배제의 원칙 등을 사실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적인 절차나 전문화된 관행으로 수용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경험주의적 이분법도 이 과정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 언론인들은 이미 ‘객관적 보도란 달성할 수 없는 이상적 목표’라는 인식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상으로 삼고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고 믿었다고 한다. 사실 명제와 의견 명제의 구분이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규제적 이념(a regulative ideal)’로 작동했던 것이다.⁶⁾

6) 미국 언론법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법적 판단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거츠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신념이 흔들릴수록 '사실의 확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진다. 티크만(Tuchman, 1978)은 미국 언론인들이 '사실'을 확립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의견을 담아내는 기법을 간파해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언론인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른바 '사실성의 망(the web of facticity)'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 어떤 정치인이 'A'라는 주장했을 때, 'A' 내용의 사실성은 의심스럽더라도, "그 정치인이 A를 주장했다"는 것을 사실로 삼아 보도하는 수법이 있다. (나) 사실에 근접하고 잘 알 것으로 인정되는 인물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 직접 인용문을 이용해서 발언 사실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기자는 그 진술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인용된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따라서 기자 자신의 견해나 판단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사실성의 망'을 이용함으로써 기자의 관점의 선택이나 견해를 뒤로 숨기고 객관적 인용 사실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셋슨이 제시한 미국 언론의 객관성 규범의 강화에 대한 설명과 티크만이 제시한 사실성 확립 기제에 대한 설명은 모두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언론 규범이 복잡하게 작동하는 일종의 '전략적 관행'임을 시사한다. 요점은 사실에 대한 불신과 주관성에 대한 염려가 (사실에 대한 신뢰와 객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언론의 객관성 규범의 강화를 유도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주관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등의 실천적 규범을 채택한다. 에트마와 글래스(Ettema & Glasser, 1998, 83)에 의하면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론인이 주의 깊게 선택하는 일종의 담론 전략이다. 언론인은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가) 주관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필요한 도덕적 논의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즉 인용문의 사용이나 양버론의 사용 등을 통해서 언론인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믿는 바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도덕철학자들에게는 이미 의심스러운 개념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현대 언론인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동요하는 이념이면서도 아직까지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념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의 객관성을 강력하게 의심하면서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언론전문직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1996년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객관성'에 대한 언급을 없앴다. 협회는 이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것을 권고할 뿐이다. 풀러(Fuller, 1996)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가 쇠퇴했음을 지적하면서,

판결(Gertz v. Robert Welch Inc., 1974) 이후 확립된 것으로서, 순수한 의견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부터 완벽하게 면책된다는 원리를 들 수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사실을 포함한 의견의 경우에는 절대적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완화된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일단 사실과 의견의 구분 가능성과 사실의 검증 가능성은 미국 명예훼손 판례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되었다(이재진, 2003). 참고로 한국 법원은 순수한 의견이라도 명예훼손의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의견과 사실 표현의 구분이 명예훼손 판단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객관 보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에트마와 글래서(Ettema & Glasser, 1998)는 실제 언론인들이 언론 현장에서 객관성 이념을 유기하지는 않는다고 관찰했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탐사보도 언론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에트마와 글래서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쓸 때 ‘양심의 작용’이 아닌 ‘경험적 방법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언론인들은 아직도 “사실이 말하게 한다” 또는 “언론은 정보를 주고, 독자가 결정한다”는 준칙을 이용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이 실행에 대한 반성에 근거해서 새롭게 언론규범을 정초하려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는 저서인 〈언론의 기본 요소(The elements of journalism)〉 역시 미국 언론인들이 객관성과 진리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Kovach & Rosenstiel, 2001).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진실 추구가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원칙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검증과 종합’을 통한 진리의 추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언론인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사실의 객관성도 때에 따라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때에 따라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등 혼란스럽게 군다. 요컨대 언론인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놓고 동요하면서 또한 교묘하게 그 구분에 기대어 자신들의 언론 활동을 정당화시킨다.

결국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규범은 이중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첫째, 그것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과 같은 객관주의적 방법론을 명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언론 보도가 가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숨기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둘째, 이런 숨김을 통해서 언론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에트마와 글래서(Ettema & Glasser, 1998, 89)는 이 두 수준의 활용을 각각 ‘언론의 아이러니’와 ‘우울한 이중적 아이러니(the melancholy irony of irony)’라고 지칭했다. 그들은 이런 이중적 규범은 현실적으로 세련되고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동시에 자기 파괴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개별 언론인이 이런 ‘아이러니’와 ‘이중적 아이러니’를 진심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언론인 중에는 이 문제로 어떤 아이러니도 경험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실과 의견의 분리주의자’부터 가장 교활하게 자신의 경향성을 숨기는 노회한 언론인까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점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규범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론인들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활용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편의에 따라 또는 주의 깊은 전략에 따라 활용되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 규범은 결국 언론인의 주관적 편향을 은밀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4. ‘사실 주장’과 ‘옳음 주장’에 대한 언론의 윤리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불가능함을 논증하고 있으며, 언론인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에 대해 무엇인가 주장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주요한 문제점인 경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까? 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란 개념을 수정해서 확장해서 이해할 것을 주장하려 한다. 이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들과 개념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사실 표현과 의견의 분리 문제

먼저 기존 윤리학에서 논의된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 없다’거나 ‘가치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다’ 등의 주장은 언론의 사실 표현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셔튼, 터크마, 에트마와 글래서 등의 관찰과 논의를 통해서 제시했듯이, 언론인들은 사실을 신뢰하고 가치를 불신해서 언론의 객관성을 규범화시킨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반대로 사실 표현을 의심하고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언론의 객관성 규범을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언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위한 장치들이 사실은 언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된다는 에트마와 글래서의 관찰이 내 주장의 전제가 된다. 언론인들은 일상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기사의 구분, 정보는 제공하되 판단은 미룬다는 금언의 사용, 인용부호 사용과 양시양비론의 활용 등을 통한 주관성 배제 등을 수행한다. 언론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규범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그 규범을 (가) 스스로 믿지 않는 사실 표현과 의견의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구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 언론인이 의도하는 특정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의 경향성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문스럽다. 첫째, 우리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언론 규범을 내면화시키지 못해서 경향적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규범화시켜 활용함으로써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것일까? 둘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유지하는 편이 한국 언론의 경향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 한국 언론인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는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일률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한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며, 실제 이유들도 다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쉽지 않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야마 관행’과 같은 일상적인 언론 행위와 긴밀하게 관련되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추구되는 혐의가 있다는 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에서 나는 언론인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넘어서 참고 옳음에 대한 언론 행위를 각각 정당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2) 보편적 화용론의 기본 개념들

하버마스(Habermas, 1976/1979)는 언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보편적 화용론(universal pragmatics)을 제시했다. 이는

일상적인 언어의 분석을 통한 경험적 종합을 통해 얻은 것이라기보다 언어 사용자의 직관적 지식을 형식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별적 언어 사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별적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발생 구조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방법론은 촘스키(Chomsky, 1957)가 언어능력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문법구조를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촘스키가 제시한 언어능력의 체계란 결국 개별적인 문장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문법적 문장과 비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유사하게, 모든 의사소통은 개별적인 언술이 의미를 갖고 수용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것은 능력있는 의사소통 참여자가 언술 행위에서 요구하는 진리, 규범성, 진정함에 대한 타당성 주장들(validity claims)이다. 이런 타당성 주장은 인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따라서 의사소통의 합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하버마스는 오스틴 등의 언행이론에 근거해서, 모든 의사소통은 최소한 이중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내가 전화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 일단 전달된 내용은 ‘내가 전화 하겠다’는 명제의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 간의 약속행위가 이루어진다. 즉 간단한 언행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소통은 (가) 소통된 바라고 할 수 있는 명제의 내용 수준과 함께 (나)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s)를 통해 확립된 화자와 청자가 이해가 발생하는 간주관적 수준이 동시에 작동한다. 전자가 내용적 소통이라면 후자는 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전자가 사실을 표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대인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전자는 전달된 명제의 내용에 대한 진리를 주장하고, 후자는 확립된 대인적 관계가 옳거나 적절함을 주장한다. 즉 언어 행위의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차원의 의사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사소통 양식인 표현적 수준을 더해서 (다) 화자의 의도의 진정함을 주장하는 의사소통 차원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한 요점은 모든 의사소통이 이 세 가지 정당성 주장을 동시에 포괄하지만, 의사소통의 양식과 기본 태도에 따라 이 중 한 가지가 ‘주제적으로 강조되고’ 나머지는 배경에서 암시적으로 내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술적 언행에는 명제의 내용에 대한 참됨에 대한 타당성 주장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대인적 관계의 적절함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잠재적일 뿐이다. 또한 이 경우 화자의 진정함이 표현된다하더라도 배경에 암시적으로 전제될 뿐, 진술적 언행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반대로 규제적 언행의 경우에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확립된 대인적 관계가 옳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주장이 전면에 등장한다. 반면 전달된 내용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장과 화자의 진정함에 대한 주장은 잠재적이 된다.

이해가능한 문장이 발화된 조건에서,⁷⁾ 의사소통 양식과 발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체계를 <표 1>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구체적으로 (가)명제의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인지적인 진술적 언행, (나)대인적 관계가 옳거나 적절함을 주장하는 상호작용적인 규범적 언행, 그리고 (다)화자의 의사가 진정함을 주장하는 표

7) 문장의 문법성은 그 문장이 모든 청자에게 이해가능하다(comprehensible)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타당성 요구 이전에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표 1〉 의사소통 양식과 주제적 타당성 요구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양식과 기본 태도	언어행위 유형	주제	주제적 타당성 주장	현실의 영역	보편적 언어 기능
인지적: 객관화 태도	진술적 언행	명제의 내용	참됨	외재적 자연의 세계	사실의 표상
상호작용적: 규범 확인적 태도	규범적 언행	대인적 관계	옳음, 적절함	“우리”의 사회 세계	정당한 대인관계의 설정
표현적: 표현적 태도	인정	화자의 의도	진정함	“나”의 내적 세계	화자의 주체성 노출

현적인 인정 언행을 포함한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을 주장하는 진술적 언행은 사실의 표상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는 발화 행위자의 외재적 세계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 옳음이나 적절함을 주장하는 규범적 언행은 대인관계의 설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발화 행위자가 포함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규범 확인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진정함을 주장하는 인정적 언행은 발화 행위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는 주관적 세계의 표현과 관련된다. 모든 이해가능한 의사소통은 이런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이 아닌 전략적이거나 왜곡된 의사소통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주장에 대한 이해와 응답에 따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3)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

나는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참에 대한 타당성’과 ‘옳음에 대한 타당성’간의 구분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윤리적 책임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같은 협소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응답할 의무를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 된다. 언론은 때로 외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참과 거짓(true or false)’ 여부를 결정하는 진술적 언행을 수행하며, 때로 공동체의 안녕과 선에 대한 ‘옳거나 그름(right or wrong)’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적 언행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두 언행은 항상 결합되어 나타나며 보통 서로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두 언행에 대해 요구되는 타당성 주장의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이런 요구에 응해서 수행해야 할 윤리적 과제도 구별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타당성 요구들에 대해 혼란스럽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제기된 특정한 타당성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주장할 것을 주장하는 언론의 경우 특히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 기사에 기자의 주관적 관점이 더해지면서 윤색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통적인 언론 윤리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기사에 사실적 표현만 남기고 주관적 관점에 따른 윤색적인 표현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언론학자들의 관찰과 주장은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모든 기사는 스트레이트건 해설 기사건 기자의 규범적 언행에 대한 ‘옳음’ 또

는 ‘적절성’을 문제 삼는 타당성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타당성 요구에 대해 각각 정당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즉 윤색적 표현을 사용한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윤색적 표현을 내린 판단 근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윤색적 표현의 대상이 된 인물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을 공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관적 의견이나 윤색적 표현을 제거할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언제나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의견이나 윤색적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당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언론의 진술적 언행에 대해 검토해 보자. 스트레이트 뉴스를 이용해서 사건에 대한 참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전달하려는 경우는 물론, 사실과 같은 의견 기사에도 진술적 언행이 수행된다. 즉 언론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사실’, 즉 명제적 내용의 참됨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가치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성, 타당성, 관련성 등과 같은 인식론적 가치들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개입해야 비로소 사실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가치 개입의 문제와 별도로 제시된 명제가 ‘참’인가, 즉 ‘진리’인가의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기사가 스트레이트이건 해설 기사이건 항상 이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의 규범적 언행은 진술적 언행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언론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거나, 사회적 낭비를 피할 것을 권유하거나, 독자의 관대함을 요구하거나, 독자의 용기를 불어넣는 일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언론의 규범적 언행은 당연히 옳거나 그르거나, 아니면 둘 가운데 어디쯤 속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시민들이 언론의 이런 규범적 언행을 문제 삼는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면, 언론은 바로 그런 타당성 주장에 ‘정당화 전략을 통해 응답할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자신의 규범적 언행에 대한 정당화가 언제나 요구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 즉 규범의 문제만을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언행에 ‘참 또는 거짓’의 문제, 즉 진술적 문제는 주제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을 뿐, 전체 기사의 수준에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거짓된 정보에 기초해서 공동체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언론의 진술적 언행에 요구되는 타당성이 위반되면,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거짓된 신념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위반 효과가 초래하는 문제점 때문에 언론은 윤리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런 책임에는 유보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진술적 언행은 사실, 즉 참된 명제를 추구하는 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사실은 항상 잠정적으로만 그러하므로, 언론과 같이 시간적 압박 속에 진술적 언행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에서 완전한 사실 규명을 기대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 아마도 완전한 사실의 규명이란 일련의 불완전한 사실들의 충돌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일지 모른다. 생각해 보면, 개별 언론사는 언제나 낙종하고, 언제나 오보를 낼 위험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개별 언론사의 커버리지는 언제나 부분적이며, 개별 기사는 언제나 불완전해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본성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언론의 타당성 대응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고, 자료를 검증하고, 근거가 결론을 지지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등은 언제나 중요하며, 진술적 언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언론의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요구가 위반되면, 언론은 독자 또는 정보원가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하며, 결국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규범적 언행에 전제되는 일련의 가치들, 즉 다양성, 공정성, 균형성 등과 같은 고전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보도가 말로 관계적 적절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때로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억압적이며, 언론이 가정하는 가치나 규범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언론의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때로 사회적 공동선의 추구는 다양성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다양성의 추구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한다. 이 경우 언론에 대한 일련의 타당성 주장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공동선 주장, 다양성 주장, 공동체의 가치 등 각각의 가치를 방어하고 그에 근거한 규범적 언행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된다. 각 가치를 전제하는 규범적 언행이 정당화되더라도 다른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음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대한 결정적 응답은 때로 반성과 검토를 위해 유보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유보적 조건 때문에라도 규범적 주장은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당화는 언행의 당사자, 즉 언행자와 그 언행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정당화되지 않은 규범적 언행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 글에서 내가 주장하는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이란 언론의 참에 대한 주장과 옳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각각 정당화해야 할 내용과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이는 분명 철학자들의 '사실과 가치의 분리'와 같은 형이상학적 구분이나 언론인들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같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언론윤리와 다르다. 그러나 나의 구분은 그들의 염려나 고민의 핵심을 보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참과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옳고 그름을 다루는 방법은 다르며 그에 대처하는 윤리적 의무도 각각 다를 것이라는 염려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수 없지만, 각각에 대한 의무는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당화할 수 없는 규범적 주장을 제시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규범적 주장을 뻔뻔하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인의 오래된 양심도 고려해야 한다. 경향적 언론이란 바로 이런 기만적이거나 뻔뻔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울 수 있는 언론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만적이거나 뻔뻔스럽게 굴기 위해 언론인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염려와 고민 때문에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소용없거나 심

8) 언론학보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 중의 세 번째 타당성 주장, 즉 진정성 주장에 대한 응답도 언론윤리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든 언행은 진정성 주장을 포함하고 언론 기사도 역시 그러하므로 이 지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제기되는 언론 비판 중에는 언론인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기에, 이 지적은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의 관점에서 한국 언론의 경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요구와 관련된 분석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결론만 간단히 제시하자면, 나는 우리 언론이 진정하지 않아서 문제라기보다 '진정으로 경향적이어서' 문제라고 본다.

〈표 2〉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

언론의 언행 유형	주제적 타당성 주장	위반 효과	유보 조건	정당화 전략
진술적	참됨	거짓 신념 유도	사실 확인은 과정적, 잠정적	경험적 근거 확인 타당한 추론 검토
규범적	옳음 적절함	관계적 위기 신뢰의 위기	사회 규범은 때로 억압적	다양성, 공정성, 균형성 등 적용 검토

지어 어려움을 더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언론인의 고민의 내용을 모두 내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과거 언론인이 염려하고 고민했던 바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한데,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은 바로 그런 검토와 대처를 위한 것이다.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의 구분은 언론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시켜 준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제기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타당성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진술적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경험적 검증과 타당한 추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언론을 윤리적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옳음이나 적절함에 대한 규범적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화하지 못하는 언론도 윤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타당성 주장을 교란시켜서 진술적 언행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전환시키거나 ‘규범적 언행’을 ‘참과 거짓’의 문제로 치환시킴으로써, 제기된 타당성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언론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반대로 이 두 언행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에 대응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언론은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언론이다.

5. 결론과 제언

이 글에서 나는 고전적인 언론 규범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관련된 철학적, 언론학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것을 ‘언론의 진술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확장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의 분리’의 무리함을 피해서 언론 윤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결국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도 어려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쓸 필요가 없음을 제시한다. 그보다는 ‘언론의 진술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 주장에 각각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제기되는 요구에 정당하게 응답함으로써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한국 언론에 흔히 나타나는 경향적 특징을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기사로 잠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고, 그런 경향성을

〈표 3〉 언론의 경향성 극복을 위한 실행 규칙

기사 종류	경향적 특징	타당성 요구	언론 윤리적 가치	언론인의 실행 규칙
스트레이트 기사	사실의 선택	참의 범위에 대한 요구	관련성과 완전성	- 배경 자료의 검색 - 관련 정보원 인터뷰
	윤색적 표현	참에 대한 표현 정당성요구	표현의 타당성	- “더하지 말 것” - 표현의 근거의 제공
	전제된 가치	참에 대한 적절성 요구	전제된 가치의 적절성	- 취재 동기의 투명성 - 예상된 독자의 가치
의견 기사	근거 없는 의견	옳음의 전제인 사실성 요구	의견 근거의 정당성	- 관련 자료의 수집 - 정보의 사실성 확인
	비일관성	옳음의 일관성 요구	진정성에 근거한 일관성	- 자신의 과거 주장 검토 - 상황 논리 검토
	불공정	옳음의 공정성 요구	이해 당사자 배려	- 당사자 목소리 반영 - 적절한 대변자 찾기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논의했듯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적 특징은 사실의 선택, 윤색적 표현, 전제된 가치 등이 있다. 의견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경향적 특징은 근거 없는 의견, 불균형, 불공정 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윤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은 한국 언론의 경향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행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우리 언론의 경향적 특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타당성 요구의 종류를 제시하고, 그런 요구에 윤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언론의 주요 가치를 제시한다. 마지막 칸에는 〈언론의 기본요소〉 등 기존 언론윤리 규범에 대한 논의에서 발췌한 실천적 대응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실을 주장하는 기사에 제기되는 타당성 요구와 그에 대한 윤리적 대응을 검토해 보자. 첫째, 스트레이트 기사가 사실을 자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선택된 사실이 독자의 관심이나 이해에 건주어 완전한지에 대한 타당성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의 윤리적 의무는 바로 이 요구에 답하는 것이 된다. 즉 기사가 주장하는 참의 ‘범위’와 ‘완전성’과 관련해서 기사의 재현 방식을 검토하고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인은 배경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관련 정보원을 폭넓게 인터뷰 하는 등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윤색적 표현은 언제나 타당성 요구의 대상이 된다. 즉 참에 대한 명제를 제공하면서 특정 가치나 규범을 암시하는 표현을 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대처 방안은 ‘불필요한 의견이나 표현을 더하지 말 것’이라는 소극적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즉 윤색적 표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언론은 그런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기사에서 숨겨져 있는 가치적 전제가 있을 수 있다. 독자나 비판자는 이런 전제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언론은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에 정당하게 응답해야 한다. 언론은 취재 동기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의심받을 만한 언론의 전제인지 밝혀

서 제시함으로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를 탐사보도하는 경우, 언론의 동기가 무엇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은 이런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취재 동기를 밝히거나, 아니면 제기된 의심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은 적어도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초보적인 대응이 아닌 타당성 요구에 대한 정당한 응답의 방식으로 언론의 경향성 비판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의견 기사의 경향성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의 제시이다. 의견 기사에도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타당성 요구가 제기되며, 때로는 의견 기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당연하지만, 이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사실성 확인을 통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언론의 옳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옳음을 판단한 근거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패했다고 비난하면서, 다른 정치인의 부패는 정치적 능력인 것처럼 평가해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판단 기준의 일관성 요구가 제기될 경우, 언론은 그 기준이 일관됨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연하지만 그런 일관성의 근거에는 진정함이 전제된다. 즉 언론인이 믿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진실성이 없으면서 일관된 가치나 이념의 적용을 주장하면 오히려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제시했던 정치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일관되게 판단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되, 이런 판단이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근거한 것임을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언론에 대한 불공정성 비판을 예로 들자면, 이는 일반적으로 옳음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타당성 요구가 제기된다. 이런 타당성 요구에 대해 언론은 뉴스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취급해야 할 의무, 즉 이해당사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기사 내용에 반영한다든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어려울 때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최적의 대변자를 찾아 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격률로 구체화될 수 있다(이준웅·김경모, 2008).

이 글에서 주장한 내용은 실천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언론인에 필요한 교육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같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진실적 언행과 규범적 언행에 대한 정당화 방식에 대한 언론 규범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낳는다. 즉 뉴스에 사용되는 개별 문장이 사실 문장인지 아니면 의견 문장인지 등을 시시콜콜 따지는 것보다 각 문장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타당성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윤리적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언론인에 대한 교육도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타당성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천 규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글의 주장이 언론인의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언론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의 관행과 연관된 제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오래된 언론 규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을 뿐, 구체적인 언론 현장과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야마'를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정보원을 찾아 인터뷰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글의 논지를 근거로 이런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제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면서 ‘논란이 예상 된다’거나 ‘의혹이 제기 된다’ 등과 같은 윤색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근거 없이 ‘기대 된다’ 또는 ‘전망 된다’ 등의 추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과연 어떤 현실적 조건에서 이런 기사쓰기가 자행되는지 그 조건을 추적해서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제언은 후속 연구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 언론의 경향성의 징후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단순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것’이 아니며 보다 낫은 대안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 참고 문헌

- 강명구(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6.
- 남재일(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 학연구』, 8(3), 233-270.
- 박재영(2005). 공정성의 실천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167-195.
- 송용회(2006).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프로그램/텍스트 13.
- 윤영철(2004). 『공정성 논쟁으로의 초대: 공영방송 기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택진·김경모·이준웅(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재진(2003).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서울: 나남출판.
- 이준웅·최영재(2005).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5. 5~35.
- 이준웅(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규범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67(겨울호), 9~44.

Bond, E. J.(1996). *Ethics and human well-being*. London: Blackwell.

Chalaby, J. K.(1996). Journalism as an Anglo-American invention: A comparison of the development of French and Anglo-American journalism, 1930-1920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1(3), 303~326.

Ettema, J. S., & Glasser, T. L.(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Gamson, W. A., & Modigliani, A.(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un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Habermas, J.(1976/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Tr. by T. McCarthy.

- Boston: Beacon Press.
- Kovach, B., & Rosenstiel, T.(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Mindich, D. T. Z.(199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urdoch, I.(1971). *The sovereignty of goo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utnam, H.(2002). *The collapse of the fact/value dichotomy and other essay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e, W. V.(1961). Two dogmas of empiricism. In *Quin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iller, D.(1981). *Objectivity and the new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udson, M.(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 Schudson, M.(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 (2), 149 ~ 170.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illiams, B.(1986). *Eth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Zelizer, B.(1993).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 219 ~ 237.

최초 투고일 2009년 12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0년 1월 28일